

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26일
- 발 의 자 : 박갑상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혜정안경은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8일

2. 제안이유

-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)
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
-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대해 규정함(안 제6조)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재정지원 및 주차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 및 제8조)
-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에 대해 규정함(안 제9조)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, 제11조)
-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(안 제12조)
-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「도로법」, 「행정대집행법」
-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- 기 타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주요 제정 내용

-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급증 및 대구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영업 개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도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.
 - 안 제1조 ~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, 이용자, 대여 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, 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과 관련한 시장과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 ~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고, 필요한 사업, 안전교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 시책사업 활성화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8조 ~ 안 제9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도로와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시

도로법에 따라 이동보관·매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,

금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영업이 개시되고 일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됨에 따라 시민 보행환경 저해와 불법 도로점용 문제,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

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와 설치비용 지원 및 무단방치 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.

○ 안 제10조 ~ 안 제13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시장과 구군,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, 권한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
도로교통법 개정·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완화¹⁾되고 새로운 교통수단 필요성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가에 대응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명시하였음.

1)도로교통법 개정(시행 2020.12.10.)

현행) 운행자격 만 16세이상,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/ 차도 우측

개정) 운행자격 만 13세이상

/ 자전거 도로, 차도우측

안 제11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 속도를 15km/h이하로 조정하도록 권장한 것은 한국교통연구원 “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²⁾” 및 도심 보행환경, 안전사고 예방 효율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.

- 아울러, 본 조례안 예고기간(10.30.~11.10.)중 1건의 의견(붙임)이 제출 되었으며, 주요내용은 ①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, ②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/h 이하로 조정, ③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·운영 등 3개 조항에 대한 부적절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음.

□ 종합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2)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(한국교통연구원)

- 전동보드류 통행목적별 이용거리, 시간, 이용속도

· 통근	이용거리(5.59km), 이용시간(16.92분), 평균속도(19.82km/h)
· 통학	이용거리(5.18km), 이용시간(15.13분), 평균속도(20.54km/h)
· 업무	이용거리(4.83km), 이용시간(14.24분), 평균속도(20.35km/h)
· 레저/운동	이용거리(6.92km), 이용시간(27.4분), 평균속도(15.15km/h)

- 다만,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이 논의 중으로 상위법령 제·개정시 본 조례에서 규정한 일부 내용이 법령 정비 등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를 위한 현행법상 한계가 있으므로,
 - 본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형 전동장치 주차시설 기준,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조속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이상으로,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붙임 : 제출의견 개요(1건)

제정안	동의여부	이유 및 대안제시
제11조 (대여 사업자 준수사항)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		
1.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	반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IoT와 연동되지 않는 헬멧 보관함 부착 및 헬멧 비치는 헬멧을 분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적절하지 않음. -IoT와 연동되는 방식은 아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, 해당 문구는 시기상조임. -또한, 공유 안전모는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, 사업자들이 매일 청소를 한다고 해도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전파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음. -안전장구 착용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경에는 심분 공간 하나 세계적인 질병이 대유행중인 시기이므로 자칫 나쁜 공중 보건 환경과 위생을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. -대체 제안: 대여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민관이 협력해 사용자 안전장구 착용에 최선을 다한다.
2.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/h 이하로 조정	반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운영 결과, 15km는 이동수단으로서는 과도하게 느린 속도라고 판단됨., 교통수단으로서 20km 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세계 대부분의 PM 관련 사고는 공유형 PM이 아닌 개인 소유의 PM에서 발생하며 이는 불법 개조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. -또한, <u>최고속도를 15km 로 제한할 경우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져 법을 준수하는 공유 PM 사용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임.</u> 대체 제안: 최고 속도 20km 이하로 조정 혼잡 구간 및 야간/악천후에 최고 운행속도 선별적 조정
3.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·운영	반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최근 서울시와 모빌리티협회는 도크리스방식을 전제로 한 모빌리티 주차 가이드라인을 내용으로 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. -최근 개최된 제8차 규제, 제도 혁신 해커톤에서도 도크리스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주차 가이드라인을 심화, 발전시켰던 바 있음. -주차장의 경우 그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효용이 급격히 떨어지며, 현실적으로 도로 공간 위에 충분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움. -또한 업체들은 주차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이용자 계도, 잘못된 주차 시 패널티 부과 및 현장 요원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자정적 노력을 하고 있음. 대체 제안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